

【미디어로 본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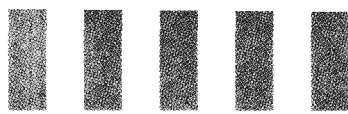
하수처리장 통합시스템 비리의혹

환경부·산하기관 관련자 소환조사

참여정부의 공직기강에 대한 사정바람이 거센 가운데

태 경찰이 환경부와 산하 관리공단 직원들의 수뢰와 특혜의혹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8월 12일 환경부와 일부 환경업체에 따르면 환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하수통합시스템)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접대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환경부 하수통합시스템 사업과 관련, 산하 환경관리공단의 해당부서 관계자 역시 일련의 비리의혹에 대한 진상을 해명하는 등 곤혹을 치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사업 주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일부 업체들이 하수통합시스템사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청와 대와 검·경찰·감사원 등에 진위파악을 가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수사기관은 당시 환경부의 통합시스템사업 업무를 추진한 C모씨를 포함, 공단의 L모씨 등이 잇따라 소환돼 조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건의 진상은 환경부의 C씨 등이 업체를 상대로 특정하수처리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입찰 또는 계약이 성사되도록 지자체와 산하 공무원에 무언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비화됐다.

일부 업체가 밝힌 경주하수처리장의 경우 U사가 최근 18억원 규모의 하수통합시스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C씨가 관할 지자체에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하수처리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는 추진사업을 위해 환경부에 사업신청을 하면 관련 위탁사업에 관해서는 산하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이끄는 한편, 상급기관인 환경부가 국고지원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수사선상에 오른 U사는 C씨에게 상당량의 자사 주식을 배당하는 한편, 간헐적인 향응은 물론 입찰과정에서 특혜를 부여받도록 배려한 의혹도 받고 있다.

당초 IT를 기반으로 환경사업에 뛰어든 U사는 2000년도 이래 하수통합시스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업종의 다크호스로 이름을 끌은 바 있다.

수사 대상에 지목된 일부 업체들은 "리스트에 열거된 업체들 중 상당수가 타 산업분야 협회나 관련 회사들로

여겨진다"며 "하수통합시스템이란 거대 환경시장의 문을 노린 경쟁업체간의 사업추진에서 발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 감사과의 Y모 씨는 "지난 2001년 환경관리공단 정기감사이후 현재까지 공단 정기검사를 시행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며 "상황에 따라 공직감찰은 지속적으로 펼쳐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 산하기관 업체들이 각종 비리로 얼룩진 일련의 사건이 불거지면서 지속가능한 정책추진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수사 리스트에 거론된 업체들에 대한 루머가 사실로 드러나면 예기치 못한 치명타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점쳐진다"고 우려했다.

비리의혹 사건은 곧 경찰청의 발표에 이어 서울지검 특수부로 배당된 뒤 기획수사에 들어갈 것이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 수사국의 한 고위간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수사의 난맥상에 파장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 사안에 노코멘트 할 수 밖에 없다"며 "금명간 하수처리장통합관리 시스템사업을 둘러싼 비리의혹 전말을 브리핑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일보 8.11]

산자부 세녹스, 발암물질 배출·연료장치 부식

산업자원부는 유사휘발유 논란을 빚고 있는 '세녹스'에 대해 환경성능평가를 벌인 결과, 휘발유에 비해 발암물질인 알데히드 배출이 훨씬 많고 연료장치 부식 등 엔진 내구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8월 12일 밝혔다.

아반떼XD(2003년형)로 실험한 결과, 세녹스는 휘발유보다 포름알데히드가 21.4%, 아세트 알데히드 30.3%, 기타 알데히드 114.2% 등 알데히드 배출이 62.1%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자부는 그러나 일반 휘발유뿐 아니라 세녹스도 알

【미디어로 본 환경】

데히드 배출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덧붙였다.

연비도 휘발유보다 낮아 아반떼XD에서는 4.1%, 쏘나타II (94년형)는 0.3%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탄화수소(HC),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등 배출가스는 휘발유와 세녹스의 우열을 가릴 수 없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실험으로 세녹스가 환경과 성능에서 우수하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소비자들도 값이 싸다고 세녹스를 휘발유 대신 사용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증가시키고 탈세·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며, 인체와 차량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산자부는 작년 6월 세녹스 시판 직후 유사휘발유로 간주해 단속에 들어갔으며, 지난 5월말 김성현 고려대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 '세녹스 환경성능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작업을 벌여왔다. [연합뉴스 8.12]

연료첨가제 단속 희비 엇갈려

정부가 세녹스와 LP파워 등 유사휘발유 제품에 대한 본격 단속에 나서자 주유소 업계가 반기는 반면 판매업자와 이를 사용했던 운전자들은 반발하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5일부터 석유정제업자 또는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미만으로 제한하고 판매용기의 규격도 휘발유는 0.55, 경유는 2.0로 제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료첨가제 중 첨가비율이 1% 이상인 세녹스와 LP파워 등은 더 이상 연료첨가제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모(47. 시흥시 정왕동)씨는 "그동안 세녹스와 LP파워 등 유사휘발유로 판매로 인해 휘발유 판매량이 10%이상 떨어지는 등 영업에 큰 타격을 받았다"며 "뒤늦게나마 정부에서 제도를

고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서는 것은 다행"이라며 환영했다.

주유소 업계의 관계자들은 이번조치로 그동안 만성적인 영업부진으로 고통을 겪어온 주유소들의 형편이 조금 나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세녹스와 LP파워 등 연료첨가제 판매업자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애꿎은 영세 판매업자들만 피해를 입게됐으며 이번 정부의 조치를 못마땅해했다.

연료첨가제 판매업자 이모(42.시흥시 장곡동)씨는 "이번 정부의 조치 때문에 재고로 쌓여있는 제품을 급히 처분하고 있다"며 "지난 2001년 첨가제 제조기준 적합 판정을 내린 정부가 다시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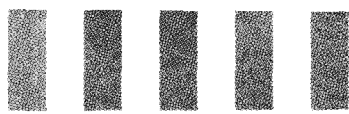
또 그동안 연료첨가제를 사용해 온 일부 운전자들도 아쉬운 표정이 역력했다. 단속이 시작된 지난 8일 5일과 6일에도 일부소비자들은 판매업자와 연락해 연료첨가제를 주유하는 등 불법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세녹스와 LP파워 등 연료첨가제들과 첨가제를 표방한 유사 석유제품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여 판매업자 및 소비자 와 단속기관 사이의 숭바꼭질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중부일보]

아파트 유독물질 외면하는 업계

새 아파트나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아본 사람이면 눈이 따갑고 목이 아픈 경험이 있을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수은주가 섭씨 30도를 넘는 여름철에는 고통의 정도가 강도를 더한다. 심한 경우에는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통증이 뒤따르기도 한다. 이런 현상을 전문용어로는 '식 하우스(sick house)'라고 한다.

대부분 페인트나 벽지, 새 가구 등에서 나오는 유독물질이 원인이다. 특히 마루바닥이나 벽지, 합판 등을 부착하는 데 사용되는 접착제의 주요 성분인 포름알데히



드가 이 같은 증상을 유발한다. 이 밖에도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벽지, 커튼, 페인트, 단열재 등은 모두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포함하고 있다. VOC는 노약자나 어린이에게 천식, 알레르기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물질로 꼽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주택에 의한 화학물질과 민중 환자가 1000만명으로 추정되는 일본에서는 1998년 정부 내에 '쾌적 건강주택에 관한 검토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올 4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質)관리법'을 제정했다. 법안의 핵심은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는 것. 또 이 시점 이후로 이어지는 건축물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주택업계는 가구당 최소 100만원 정도가 예상되는 비용 때문에 일반아파트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매년 분양가를 수직 인상시키면서 이 정도의 서비스도 못한다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동아일보 8.8]

녹색연합, 환경부 고발키로

한국전력이 송전탑을 건설하면서 페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사실을 알면서도 환경부가 같은 지역의 추가 송전탑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줘 주민과 환경단체가 고발과 감사 청구를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녹색연합은 지난 8월 5일 "지난 2001년 봄 한전이 울진~태백 송전철탑(345kV) 건설 공사를 한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일대를 지난 6~7월 현장조사한 결과 공

사 당시 임시 개설했던 진입로를 철거한 페콘크리트와 철근 등 폐기물들이 불법매립·방치된 사실을 오저리·동활리 등 10여곳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 단체는 "지난해 여름 태풍 루사로 산사태가 일어나 폐기물들이 드러나 주민들이 항의하자 한전도 불법 매립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지방환경청은 현장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지난달 초 같은 지역을 통과하는 울진~태백 765kV 송전철탑 건설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줬다"며 환경부의 직무유기 책임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주환경청 관계자는 "이미 완공된 345kV 공사는 당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준 사안이라 불법매립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며 "아직까지 현장조사를 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주민들로 구성된 '765kV 송전탑 건설반대 특별위원회' 측은 "환경부와 산림청, 한전을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원에 시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민·관 공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녹색연합 서재철 국장은 "기존 345kV 송전탑 공사 당시에도 산림훼손과 생태계 피해가 심했고, 사후 환경평가도 이렇게 부실해 꼬리치레도롱 등 희귀생물들이 살던 계곡이 파괴됐다"며 "이런 문제점에 대해 지난 5월 환경부장관과 간담회에서 건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한탄강댐 건설 주민반대 고조

건설교통부가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한탄강댐이 7월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기본계획 고시만을 남겨두자 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경기도 제 2청에 따르면 한탄강댐 반대 철원 포천 연천 3개 군(郡)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6일 오전 11

【미디어로 본 환경】

시 청와대 앞에서 환경단체 대표와 공대위 관계자,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탄강댐 건설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철원군 의회의원 7명은 이날 한탄강댐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식발식을 갖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수치조작 의혹 등과 관련, 건교부와 환경부 등을 서울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다. [세계일보 8.7]

물관리대책 13개 과제 추진 미흡

지난해 정부가 물관리종합대책으로 추진한 32개 과제 가운데 41%인 13개 과제가 미흡하게 추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이 발간한 "2003 물관리백서"에 따르면 환경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등은 지난해 물관리종합대책으로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중소규모 용수개발, 해수담수화 사업 등 3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환경부·농림부의 비점오염원 관리강화, 환경부·건교부 물관리기초자료 조사, 환경부의 지하수수질조사 및 방치관정관리 등 13개 과제들의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환경부의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상수원주변지역 주민지원 강화,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 건교부 등 3개 부의 상하수도 요금 체계 개선 및 현실화, 건교부의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확충, 농림부의 축산분뇨 자원화 대책 등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의 하수처리시설확충, 하수관거 확충 및 정비, 건교부의 지하수 수량관리 강화, 농림부의 농어촌상수도 시설확충 등 19개(59%) 과제는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지난해 물관리종합대책을 추진한 8개 부처는 지하수법 개정 등으로 지하수통합관리체제를 마련하

고, 4대강 특별법을 제정·공포 등 법규·제도정비 재원 확보 등을 통해 수자원 확보 및 수질개선사업 전반에 성과를 얻었다는 평이다.

"2003 물관리백서"는 수질개선기획단에서 "2000 물관리백서"에 이어 발간한 것으로 물관리업무 추진체계, 물관리 및 해양환경보전 종합대책 및 추진실적, 환경관련 주요정책 조정사례, 추진실적 점검분석결과 및 향후계획, 기초통계 등을 400여 페이지에 걸쳐 수록하고 있다. [환경일보 8.4]

유해가스 경보! 유기화합물 유럽기준치 3~4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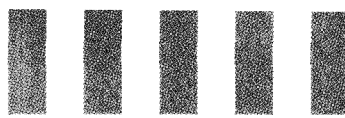
인천공항·지하상가·도서관·병원·유치원·노인복지회관 등 신축아파트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중(多衆) 이용 시설 대부분이 인체 유해가스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로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어린이집·유치원·노인복지회관 등 환자나 노약자들이 생활하는 실내도 환경 기준치를 훨씬 넘는 정도로 오염돼 쾌적한 공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은 2001년 가을 서울시내에 위치한 병원·유치원·지하철·도서관·지하상가, 인천국제공항, 과천의 미술관 등 모두 27곳에 대한 실내 VOCs 농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27곳 모두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치 73ppb를 넘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각 지점별 측정치를 보면 인천 공항 여객터미널이 270.3ppb로 가장 높았다. 이는 북유럽 환경·건축학회(SCANVAC)의 환경기준치(2등급)의 2.5배 수준으로, 터미널 신축 중이던 당시 각종 전자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대량 방출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지하상가가 188.4ppb이었으며 도서관(183.9ppb), 지하철 역사내(164.2ppb)의 순이었다.

이들 시설들은 건축된 이후 시일이 많이 지난 것들이어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음



을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학 병원의 경우 2곳 모두 153.7ppb와 133.8ppb를 기록했으며,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116.1ppb와 95.3ppb, 노인복지회관은 107.2ppb로 측정돼 실내공기에 민감한 노약자들에게 사전 안전·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들 측정치는 모두 유럽 환경기준치(1등급)를 적용할 경우 3~4배나 높은 것이다.

VOCs는 발암물질인 벤젠, 인체 유해성이 높은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등으로 실내에서는 벽지·바닥재 가구 등 건축자재, 접착제, 방향제, 페인트 등에서 발생한다. VOCs는 호흡이나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며, 오랜기간 마실 경우 호흡곤란, 혈액장애, 간장 장애, 피부질환, 두통, 임신 중독 등을 일으킨다. [조선일보 8.4]

국민 '환경권리 의식' 높아졌다

환경문제 피해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재산상 피해보다 정신적인 고통을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991년 7월 환경분쟁조정 업무 시작 이후 2001년까지 정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신청 비율은 전체 신청건수의 30%를 밑돌았으나 지난해부터 50%에 이른다고 지난 8월 3일 밝혔다.

분쟁조정위 자료에 따르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조정신청은 2001년의 경우 전체 121건의 29%인 36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63건의 46%인 121건, 올해 상반기에는 접수된 149건의 46%인 70건으로 나타났다.

재산상 및 정신적 피해 때문에 조정신청을 한 것까지 합할 경우 지난해에는 전체 조정신청 건수의 70%인 186건, 올해에는 69%인 104건으로 늘어난다.

반면 재산피해에 따른 조정신청은 99년 전체의 44%, 2000년 43%, 2001년 33%, 지난해 23%, 올해 상반기

기 18% 등 감소 추세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한 조정신청이 증가한 것은 국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의식이 커져 그동안 감수해 왔던 불편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8.4]

경기도 광주 오염총량제 추진... 주민 반발

광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하자 주민과 토지구, 개발업체들이 재산권 침해·지역개발 저해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총량으로 묶어 규제하고 총량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2003-2007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 7월 29일 시청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 대부분은 "팔당 상수원 보전을 위해 특별대책 1권역으로 묶어 엄청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 또 다시 대책없이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일부 개발업체와 토지주는 "앞으로 5년간 아파트 사업승인을 3천 500가구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나 지역숙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특정 사업에만 하수처리물량을 별도로 배정할 이 유가 뭐냐"고 따졌다. 한 주민은 "우선 오염물질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완벽한 하수처리대책을 마련한 뒤 내년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또 다른 주민은 "더 이상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시가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시는 오는 2007년까지 오염총량관리에 1천 196억원을 투입해 팔당수계 경안천 수질을 2007년까지 3급수(BOD 5.5ppm)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중부일보] ◀